

왜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히나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7시간' 말 못하나

세월호 1000일
진상규명 남은 과제

선체 인양 의문 투성이
해수부도 철저한 조사 필요
제2기 특조위 출범시킬
특별법 제정에 힘 보태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0일째다. 그러나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진도 동거차도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다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희망과 동력은 확인했다. 바로 '촛불의 힘'이다. 촛불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왜 침몰했나=검찰은 과적, 조타실수, 고박 불량, 선체 복원력 상실 등이 세월호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기계적 결함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은 꼭 필요하다. 어떤 이유로 배가 기울기 시작했느냐를 밝히야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조타 실수로 인한 급변침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은 조타기 등 기계 이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누리꾼 수사대 '자르'는 잠수함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설을 제기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확실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정부 발표에 허점이 많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월호 화물 총량과 화물의 위치 등 기본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복원성 계산부터 새로 해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청와대는 뭘했나=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은 9시45분 선장과 선원들을 태운 뒤부터 사실상 구조작업에서 손을 뗐다. 10시30분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배 안에 들어가 승객을 구조한 해경은 한 명도 없었다.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다. 구조 실패가 정말 해경의 무능 때문인지 혹은 구조 태만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밝혀야 할 쟁점이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등 단편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7시간의 퍼즐을 맞추기 역부족이다. 청와대 역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구조에 성과를 내야 할 재난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전 정부에선 작동하던 시스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사라졌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언제 올라올까=최근 해양수산부는 "인양 공정률이 75%"라고 밝혔다. 이대로간다면 올해 상반기에 세월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지난해 7월까지 마친다는 인양은 연기를 거듭해 올 상반기로 늦춰졌다. 정부는 '날씨 탓을 한다. 파고와 풍속의 변수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믿는 시민은 많지 않다. 처음부터 인양업체 선정과정과 기술력에 의혹이

많은 때문이다. 팽목항에서 만난 한 거제조선소 근로자는 "해저터널을 뚫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왜 중국에 인양을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인양이 늦어지면서 선체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인양에서 목표항 거처까지는 앞으로 상당시간이 걸릴 듯하다. 해수부는 여전히 계약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양을 총괄한 해수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양이 흔들릴 조사가 필요하다. 수습과 함께 침몰 원인을 밝힐 정밀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제2기 특조위와 함께 국민이 앞장 서야=정부 계획대로라면 세월호는 오는 4~6월 인양된다. 공공롭게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개연성이 있는 시점이다. 정치 변수에 따라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이 흔들릴 수도 있다.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에 아련과 세월호 가족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유족들은 진상규명 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조사위는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조사위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1기 특조위가 쌓은 자료를 분석·연구하면서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활동도 펼친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의 직무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가 이날 종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특조위기자 jwpark@kwangju.co.kr

양림동 문화자산 활동 근대역사 재조명 본격화

'양림동산의 꿈' 오늘 창립총회

양림동 등 광주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활동이 본격화 된다.

이처럼 새로운 지역문화 운동을 위해 결성된 '(사)양림동산의 꿈'이 9일 오후 광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행사에는 (사)양림동산의 꿈 발기인 대표를 맡은 김혁중 광주대 총장, 김희재 광주지검장, 최홍진 호남신학대 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림동산의 꿈'은 광주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들의 회생·봉사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삶터였던 양림동을 기억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양림동 주변 기독교 시설 복원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발전위원회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활동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이사회를 두고 사무총장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산하에 기획·재정·여성·문화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은 김혁중 광주대총장이 맡고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문정현 전 광주주변사회회장, 안평환 YMCA사무총장,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윤영기자 penfoot@



8일 오전 부산 동구 일본 총영사관 후문 근처 소녀상 앞에서 한 시민이 딸에게 소녀상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엔 냈다...한국 성의 보여야"

아베, 국가 신용 문제 언급...소녀상 철거 압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8일 요구했다. '국가의 신용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된 NHK 프로그램 '일요토크'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성립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고 강조하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한일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도 대해서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한국 측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황교안 "청탁금지법 타격 커...시행령 개정 검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부처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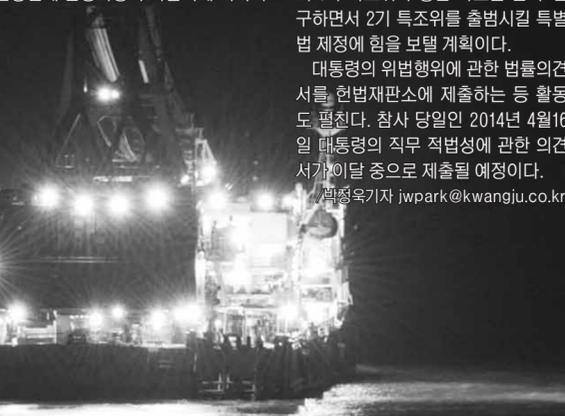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물·인력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황 권한대행 측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성장순 명창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인 성장순 명창이 지난 5일 밤 10시 30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관련기사 17면> 1934년 광주 금남로에서 태어난 성명창은 공기남, 김연수, 정영민, 박복주, 김소희, 등 당대의 명창을 사사했으며 '보성소리'의 맥을 이어온 소리꾼이다. 전국명창 경연대회 1등, 제4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 장원, KBS 제1회 국악대상 판소리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1년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지정됐으며 1994년 최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광주시립국극단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장지인 보성 판소리성지 공원에서 영결식과 추모공연이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호 침몰 999일째인 8일 새벽 진도 동거차도에서 바라본 상하이셀비지의 바지선이 침몰 해역 주변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동거차도=김진수기자 jeans@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 특검, 형사 처벌키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김상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로 임명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종덕과 김상삼을 오늘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조사를 마친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임명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광주국제기독교학교(GICDS)는 크리스천 특목학교로서 영성·영어·자율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유학의 꿈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천 사립학교, 칼리지와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신앙 공동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 설립자 이 한 수 박사
▶ 서훈, 광주일교 졸업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 전, 텍사스 한인회 회장
▶ 현, 텍사스 ChemoLee lab 회장

3. 신입생 추가모집 및 입학설명회

▶ 대상
· 국내 중·고교·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
· 국내대학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미국고교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 모집과정 및 인원
· 국제반 0명 초등 중등과정(유학)
· 국내반 00명 초등 중등과정(국내대학)
· 국제반 0명 고등과정(유학)
· 국내반 00명 고등과정(국내대학)
· 일시: 2017.1.5(목) ~ 2017.1.16(월) 오전 11:00시 ~ 12:00시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기독교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gic-ds.com)
·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입학 담당자 Tel: 061-381-0000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 도동길 42-34 (성도리 산 72) Tel: 061-381-1365

직원구함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수학, 국어 교사
· 관리직 직원

광주국제기독교학교

2017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8,185백만원
※ 주권 및 불명예재산 발생 시 당해연도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 일액이 없을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개선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1. 은행대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2. 창업 및 이전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이전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 자금(세금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3. 지원조건

구분	기간(가계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용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운영자금	2년/3년	7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17.1분기 현재 1.75%)

※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함
2. 운영자금은 16년도 대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미상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기업은 은행과의 대출약정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미확시 선정 취소
4.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4. 우대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 폐광지역 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
- 폐광지역 주민 또는 단장이 직근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융자비용을 소요자금의 100% 이내까지 우대 적용

5.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홈페이지(www.mireco.or.kr) 및 해당 사군 홈페이지공시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2017. 1. 5(목) ~ 2017. 2. 3(금)
○ 접수처: 해당 사군 담당부서
○ 문의처: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033-902-6554

광산지역의 가치창조